

목포신항 생활용수 중단 위기

지자체간 t당 정수요금 달라 '물값 분쟁'… 영암군, 목포시에 공급 중단 통보

목포 신항 생활용수 공급이 목포시와 영암군간 상수도 요금분쟁 때문에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영암군은 12일까지 제납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용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목포시에 보냈다.

현재 신항은 목포시 관할로 요금 징수는 목포시에서 하지만 용수는 영암군에서 공급하고 있다.

이번 분쟁은 한국수자원공사와 목포 해양항만청이 신외항 관리수수료를 위해 총 49억 원을 들여 10.8km 구간에 관로를 매설했지만 관로에 하자가 발생해 7년 넘게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는데서 시작됐다.

목포 해양항만청은 지난 2000년 23억 원을 들여 5.1km 구간에, 한국수자원

공사는 지난 2004년 26억 원을 들여 5.7km 구간에 관로를 매설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10월 통수시험을 한 결과 목포 항만청이 시공한 수수관로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직까지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주암호 물을 공급받던 목포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장흥댐 물을 공급하려 했으나 관로에서 누수가 발생, 도로침하 등으로 우려돼 영암군 소유 대불 정수장에서 정수를 한 뒤 홍도 배수지를 통해 생활용수를 공급해 오고 있다.

이에 영암군은 2010년 10월부터 올 6월 말까지 상수도 사용요금 4534만 원을 납부해 줄 것을 목포시에 공식 요청했다. 목포시는 같은 기간 동안

목포대 남악캠퍼스 시대 연다

해양研 등 제3캠퍼스 조성

목포대학교가 남의 신도시에 제3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목포대는 지난 7일 2011년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 정부 비축 토지 사용예약승인 대상기관으로 선정돼 남악캠퍼스 시대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11년 전국 33개 지방의 비축토지에 대한 소요조사를 통해 12개 기관의 사용 예약 신청을 받아, 비축토지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사업의 구체성 등 종합적 판단 결과에 따라 목포대를

비롯해 3개 기관에 비축토지 사용을 승인했다.

목포대는 이번에 사용 승인을 받은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지구에 교육지원센터와 해양연구소 등 지역특성에 맞는 산학협력 시설을 설립할 계획이다.

목포대 관계자는 “남악캠퍼스에 전남 서남부권 평생학습 공동체 허브 구축과 산학협력을 통한 고용 활성화, 해양자원 활용한 신산업 창출 등을 목표로 평생교육원과 지역협력센터 등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영광 칠산도 괭이갈매기떼

영광 칠산도가 최근 번식을 끝낸 수만 마리의 괭이갈매기들이 날갯짓으로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이갈매기 날갯짓으로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영광 법성포에서 벡길로 30분 거리에 있는 칠산도는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제389호)로 지정돼 있다.

(영광군 제공)

복지예산 시·군별 편차 커

군산 31.7%-임실 12%, 지역간 19% 차

전북도와 시·군 지역의 복지예산 편차와 수혜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북발전연구원(전발연)에 따르면 지난해 도청의 복지예산은 1조255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3.5%를 차지했다.

반면 전주와 익산, 군산 등 도내 6개 시(市)지역의 복지예산 총액은 9580억 원으로 이들 지역 전체 예산의 26%였고 나머지 8개 군(郡)지역의 복지예산은 3270억 원으로 전체의 14.8%에 그쳤다.

특히 이들 14개 시·군 중 복지예산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임실군으로 12%였으나 군산시는 31.7%로 이들 지역 간 격차는 19%포인트를 웃돌았다.

이에 따라 도내 시·군 간의 복지격차도 커졌다.

도내 14개 시·군의 1인당 사회복지 예산 평균액은 2008년 66만4000여 원에서 2010년 88만9000원으로 증가했지만, 지역간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범이계수는 2008년 0.20에서 2010년 0.22로 확대됐다.

이는 복지예산이 증가했지만, 범이계수도 동반 확대돼 지역 간 복지불평등이 더 심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1인당 복지 예산을 보면 인구 대비 복지대상자가 적은 전주시는 평균 48만 원에 불과하지만, 노인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많은 임실 등 일부 지역은 115만 원에 달해 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인구 대비 복지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군지역이 시지역보다 1인당 복지예산 수혜액이 더 많아 지역 간 복지수혜의 격차도 뚜렷했다.

아울러 익산시와 완주군의 재정자립도는 24.3%와 23.5%로 유사하지만, 복지수혜자는 완주군보다 익산시가 배 이상 많아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지역별 복지수요와 재정의 불균형, 복지예산의 지속적인 증가 등으로 지역 재정의 전진성이 위험받는 만큼 이를 해결하려면 국고 보조사업이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전북경찰청, 전·의경 생활개선 전국 1위

전북경찰청이 최근 경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2011년 상반기 전·의경 생활문화 개선 성과보고회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같은 성과는 그동안 전북경찰이 전의경 생활문화 종합개선 대책을 시행하면서 인간·인권, 소통·화합에 중점을 두고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이다.

또 전북경찰은 전의경 부대 분대장 제도를 활성화를 위해 전·의경 잔존 악습을 지속적으로 발굴, 생활문화 개선을 위해 전의경 부대를 수시 점검하고 방문해 현장의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여왔다.

특히 전의경 부대 전경 근무시간을 45~50시간으로 줄이고 휴무를 보장함으로써 자기계발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다.

강경량 전북경찰청장은 “전의경 부대성과평가 1위에 안주하지 않고 부대 인권교육과 꾸준한 제도개선으로 전의경들을 내 자식처럼 둘째 반기에도 선전 병영문화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메니페스토 공약분야

김종식 완도군수

최우수상 수상



김종식 완도군수는 최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메니페스토 실전본부 주관의 '2011 기초단체장 담론포럼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목포시는 '수공과 항만청이 매설한 수수관로에 이상만 없었으면 t당 412원만 납부하면 되는데 t당 1160원을 납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원인 제공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목포 항만청이 이를 분담하고 빠른 시일 내에 관로를 보수해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 기자 yousou@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민선 5기 1년

정기호 영광군수

“기업 유치로 자립도시 만들것”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늘려 인구 10만명의 자립도시를 만들겠다.”

정기호 영광군수는 민선 5기 1년의 성과에 대해 “지난 1년은 대마산단 선분양 50%를 달성하고, 전국최초로 전기자동차 선도도시와 풍력발전 실증단지로 선정되는 등 영광군을 ‘대한민국 1등 군’으로 만들겠다는 포부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한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정 군수는 투자유치를 첨예된 지역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2008년부터 투자유치에 심혈을 기울였다.

정 군수는 투자유치를 신설하고, ‘기업사랑 운동’과 ‘1부서 1기업 유치 365운동’을 펼쳤으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규 투자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1년 동안 최대 2억원, 5년간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는 조례를 만드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모두 48개의 기업을 유치했으며 민선5기 1년 동안 해도 20개 기업 유치로 실행투자 3275억 원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민자유치로 조성 중인 대마 일반산업단지는 보통 완공 후 몇 년 후에야 분양이 이뤄지는 타 지방 산단들과는 대조적으로 현재 48%가 선분양이 완료됐다.

더구나 군 단위에서 유일하게

대마산단 50% 선분양

전기차·풍력산업 메카

비리 공무원 공직 퇴출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로 선정돼 전기자동차 인프라가 갖췄다. (주)에코네스사의 직구동 전기자동차 생산 공장을 대마산단에 착공하는 등 전기자동차 클러스터 조성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지식경제부의 해상풍력 ‘네스트 베드’(실증단지) 최종 사업자로 선정돼 국가 전략산업인 전기차와 풍력발전 산업의 메카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정 군수는 군 전체 인구의 60%를 웃도는 농·어민의 소득 창출을

위해서도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

군은 2012년부터 정부의 보리수 매개 폐지됨에도 과감한 역발상을 통해 ‘보리산업 특구’로 지정을 받고, 보리가공산업 집적화단지 조성에 노력중이다. 40억 원을 투자한 철보리 가공식품 공장이 가동 중이며 지난 6월 보리식품판매소 광주·전남 1호점이 문을 열었다.

글비 명품화사업, 모싯잎 명품화사업 주진, 고부가치 명품 천일염, 황금보리 꽈지와 청와리 한우의 육성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이 밖에도 군민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객 수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문화관광 사업과 스포츠를 연계발전시키는 작업도 한창이다.

그러나 정 군수는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2010년 청렴도가 전체 기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해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군은 공직내부 청렴도향상을 위해 공금횡령이나 직무관련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 수수 시 단 한차례의 비위 사실만으로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워스트리아크 아웃제’를 시행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 군수는 “지난 1년간의 성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투자유치와 사회 인프라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조익상기자 ischo@



시원한 짚신 신고 일해요
고 있다.

군산 원도심 근대문화도시 모습 드러내

역사 박물관 10월 개관 등 조성사업 순조

군산시가 짐徭을 기울여 추진 중인 ‘근대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 사업은 일제강점기 당시 군산에 건립됐던 은행과 쌀 창고 등의 건축물을 문화와 휴식 시설 등으로 되살려 군산의 구도심을 활성화하려는 프로젝트다.

시는 문화역사 체험 지구로 육성해 체험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10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월명동과 영화동 등 구도심 지역에 추진 중인 근대 건축물 정비 사업에 가운데 진포해양테마공원과 마을

미술프로젝트, 근대역사박물관 사업

옛 조선은행과 옛 일본 제1은행, 미즈상사, 대한통운창고 등 1930~1940년대 일본인이 지은 건축물을 예술창작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월명성당 부근의 ‘근대역사경관 조성사업’도 당시의 민박집과 찻집, 거리 등을 재현하고 나아가 전통주 판매점과 시음장, 특산물 판매점 등을 설치해 역사체험 공간으로 꾸미기 위한 사업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현재 여러 개로 구성된 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면 2015년께부터는 구도심 일대가 역사문화 체험 행사와 다양한 근대 건축물로 가득 찰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뉴스 브리핑

외국어 등 120개 과정 사이버 무료 강좌 개설

전북도 공무원교육원은 도민을 대상으로 외국어와 각종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사이버 무료 강좌를 개설했다.

도는 올해 초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도민이 선호하는 교육 과정을 조사해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와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 전문직 120개 과정을 선정해 개설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전주시, 법제처와 법제 업무 교류 협력 체결

전주시가 자체 법제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정부 입법 과정에 서 일선 시군의 다양한 의견수렴 강화를 위해 법제처와 교류 협력을 활성화했다.

송하진 전주시장과 정선태 법제처장은 지난 8일 시장실에서 ‘법제업무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